

보성군, 청렴정책 빛났다…전국 유일 3년 연속 1등급

■ 광주·전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살펴보니…

광주시 2등급·전남도 4등급…시·도교육청도 4등급 머물러
전남개발공사, 지역 공사·공단 유일 1등급…여수 5등급 최하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전남도는 4등급으로 하락하며 광주·전남의 2등급으로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청렴 성적표가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전남 보성군은 전국 709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3등급에서 1계단 오른 수치다.

전남도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을 나타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청렴 성적표가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전남 보성군은 전국 709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3등급에서 1계단 오른 수치다.

전남도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을 나타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져 4등급이었다.

광역의회에 대한 평가에서 광주시의회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청렴노력도 1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은 전남개발공사가 한 단계 올라 2등급을 받았고 광주도시공사는 한 단계 올라 3등급이었다.

대학은 전남대가 지난해와 같이 2등급, 광주과학기술원이 한 단계 올라 3등급을 받았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북구가 2등급, 남구

·동구·서구 3등급, 광산구 4등급을 나타냈다.

전남 기초단체에서 시 단위는 목포·순천시 3등급, 광양·나주시 4등급, 여수시 5등급이었다.

군 단위는 보성군, 해남군 1등급, 담양·진도군 2등급, 강진·고흥·곡성·무안·영광·장성·강릉·함평군 3등급, 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 4등급을 받았다.

특히, 보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청렴 최상위 자자체'의 입지를 굳혔다. 보성군은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교육 실현성,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단기 캠페

인이 아니라 제도화된 청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

보성군은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와 서약을 상시 운영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해피콜을 도입했다. 형식적 교육을 벗어나 맞춤형 청렴교

육과 청렴콘서트, 외부 익명 신고 접근성을 높인 QR코드 신고 창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등 현장 체감형 사례를 꾸준히 이어온 점도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광주 기초의회는 광산구·남구·동구의회 2등급, 북구·서구의회 3등급 순이었다.

전남 시단위 기초의회의 경우 광양·나주·여수시의회가 2등급, 목포·순천시의회

가 3등급이었다.

군의회는 보성군의회가 1등급, 고흥·담양·무안·영암·완도·장성·함평·해남·화순군의회 2등급, 신안·장흥·진도군의회 3등급, 곡성·구례·영광군의회 4등급, 강진군의회 5등급을 보였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 내부공직자 8만여명 등 30만명이 참여해 각급 기관이 1년 간 추진한 부파 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파사건 발생 현황인 부파 실태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글로컬 동구 AI 헬스케어 포럼 2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글로컬 동구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포럼'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국내외 산·학·연·관·병 관계자 5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 방향을 점검 논의했다.

광주, 내년 하수도 정비사업 1000억원 투입…침수 예방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17건 확정…도시안전 강화

국비 648억·시비 347억…악취 환경 개선 집중

광주시는 내년도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분류식 사업 등 17건이 확정돼 국비 64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지난 사업 15건과 신규사업 2건이며, 2026년에 국비 648억 원과 시비 347억원 등 약 1000억원이 반영돼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확보된 국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침수예방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하수도 악취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40km 정비 △북구 중앙6분구(두암동·우산동), 서구 서창1

분구(화정3동·상무2동·풍암동), 광산구

소촌분구(운수동·소촌동)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동구·남구 하수도 악취 개선 △극락천 유역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고,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관로 기능을 개선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

이다.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배수 능력 향상, 침수 피해 최소화, 하수 처리 효율 증대, 주거지역 악취 민원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훈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시 하수도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구성될까

與주도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중앙지법·고법 전담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란 사건 학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희람·이주영 의원이 반대 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이를 종결시켰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이날 법안 통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은 논의할 판사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농산물인증 전국 1위

284건 5664㏊ 전국 33%…연간 1만5397t 감축 효과

전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 처음 설립한 목표인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664㏊로, 경북 3265㏊, 충북 1996㏊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인증면적 1660㏊보다 약 3배인 240% 증가한 결과다.

저탄소 인증구모는 시·도별로 전남 5664㏊, 전북 4560㏊, 경북 3265㏊, 충북 1996㏊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연간 약 1만5397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

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높다.

신규 인증 신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경으로는 전국 인증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로 인증 확대 계획 수립·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꼽힌다.

특히 친환경 농업 등 단지별 단체 신청 유도, 순회 설명회 운영, 인증 현장 평가에 대한 적극 대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도에 한해 인증 교육 5회 추가 실시 건의 등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의원 '여성선거구' 4곳 확정

남구2·서구3·북구3·광산구5
비례 제한경쟁…남성후보 반발

에 따라 청년 후보의 성별을 배분(장애인 우선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에는 여성과 청년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여성경쟁선거구 지정과 비례대표 제한경쟁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밀비다를 다진 남성 후보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면서 반발도 일고 있다.

앞서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여성 경쟁선거구 지정' 및 '비례대표 제한경쟁 실시'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고위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답변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여성경쟁선거구는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로 지정됐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장애인 분야와 청년 분야로 구분해 선출하되, 비례 1번은 여성을 공천해야 해 장애인 분야 선출 후보의 성별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성특구 지정 추진에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에서 자신(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둉지 않은 저를 쫓아내려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불법당원 모집 징계 대상자 촉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보완 조사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이 의혹을 받는 일부 선출직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지역 평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으로부터 불법 당원 모집이 의심되는 징계 명단을 통보 받았다.

다만, 광주시당은 적발 건수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해 징계 수위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재 의혹 당사자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완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에 대해

다만, 광주시당은 적발 건수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청취해 징계 수위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채널 이용자들은 채널 차단 후 재추가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새해 복 받으세요', '힘내', '사랑해요', '안녕' 등 일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문구와 귀엽고 친근한 움직

임이 특징이다. 연말연시 인사 메시지 부터 일상 대화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채